"10년새 세번째…재선거 지긋지긋"

■ 또 군수 낙마…충격 휩싸인 화순군

2002년 이후 3명 선거법 위반 구속
"지역발전 발목…이번엔 제대로 뽑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네요."

오랜만에 따스한 봄 햇살이 화순군청 사무실을 가득 메웠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무겁고 을씨년스러웠다.

대법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자, 화순군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역대 민선 군수 3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물론 또다시 치러질 재선거로 행정력 공백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군청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듯 술렁였고, 주민들은 심란한 표정이었다.

공무원 A씨는 "당선 무효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걱정된다"라고 말했고, 민원실에서 만난 주민 이모(49·여)씨는 "선거만 치르느라 지역발전이 뒷전인 게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화순군수가 사법적인 단죄로 옷을 벗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02년 임호경 전 군수는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1년 7개월 만에 군수직을 잃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형준 전 군수도 취임 한 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3개월 만에 군수직을 사임했다. 이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동생인 전완준 군수가 당선돼 '형제 군수'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화순군은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부군수' '형제군수'가 탄생했지만, 결국은 '형제 군수'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낙마하는 '불운'을 맞았다.

두 집안간 반목과 주민들 사이에 양측 지지자로 나뉘어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 "선거로는 도저히 안 되니 민선이 아닌 관선 단체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군수를 선출하고 그동안의 지역갈등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이경호(42)씨는 "2002년 이후 단 한차례도 지방선거가 조용히 끝난 적이 없다"라며 "지역발전에 전 군민이 '올인' 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되는 재선거로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58)씨는 "화순 정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민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를 뽑을 수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적십자회비 납입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남구지회 회원 50여명은 24일 광주공원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적십자회비 납입에 참여하자며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회원들은 이어 대성초등학교 4거리까지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 풍향·우산동 일부 동구 편입
동림·운암1동 일부지역 서구로

광주 구간경계조정 권고안 확정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동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의 인구를 늘리고 북구 인구는 줄이는 내용의 구간경계조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동의 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동구는 5068명, 서구는 1만6681명, 남구는 4명, 광산구는 234명을 각각 증가시키고 북구는 2만1987명을 감소시키는 구간경계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구 인구는 10만2841명에서 10만7909명, 서구는 30만3726명에서 32만407명, 남구는 21만7346명에서 21만7350명, 광산구는 36만4528명에서 36만4762명으로 각각 늘게 되며, 북구는 46만7867명에서 44만588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필문대로(제1순환로)와 갈마로, 독립로를 기준으로 북구 풍향동 일부, 두암3동 일부, 중흥1동 일부, 우산동 일부(5101명)가 동구에 편입된다. 설월여고 주변 동일고로를 기준으로 남구 방림2동 일부(620명)도 동구로 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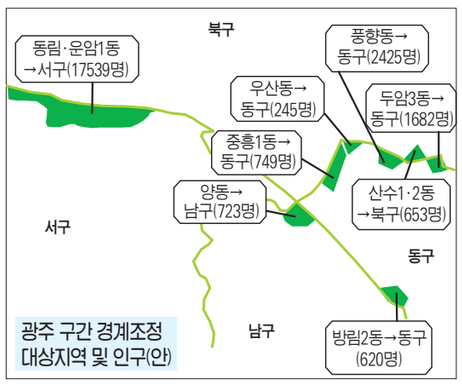
또,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동림2지구에 해당하는 북구 동림동 일부와 운암1동 일부(1만7539명)가 서구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독립로를 기준으로 서구 양동 일부(723명)가 남구에 편입되며, 남구와 서구로 분리된 신애원과 송원학원 부지도 남구로 통합 조정된다.

필문대로와 갈마로, 독립로를 기준으로 동구 산수1동 일부와 산수2동 일부(653명)가 북구에 편입된다.

영산강을 기준으로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과 신영마을(234명)은 광산구로 조정된다.

무등경기장 주변에 걸친 북구와 서구의 경계는 광주천을 경계로 재조정한다.



광주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및 인구(안)

광주시는 이날 의결된 1단계 경계조정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법정절차에 착수, 해당지역 주민 의견조사를 포함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각 구의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계조정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광주시는 이번 경계조정안이 구간 균형발전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감안,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경계조정을 2단계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권고안대로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현재의 국회의원 8명 정수와 시·구의원의 지역구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및 도심공동화대책과 연계해 2단계 구간경계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과학벨트 광주로"…"대형마트 막아달라"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사진〉은 24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중소기업 살리기 등 지역현안 건의에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고,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철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호남은 소외되어 왔다"라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호남 유치를 주장했다.

선진사회시민연대 박복용 상임대표는 "골목 점포 하나로 생계를 잇고, 꿈을 키워가는 상인들이 대기업 때문에 갈 곳을 잃고 있다"며 "재래시장 소상인들을 위해 대형마트의 싹쓸이를 제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사회통합수석실은 답을 내리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지역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모두 담아 대통령과 다른 부서에 전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지역간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직접 청취, 국정에 반영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李대통령 조용한 3주년

특별한 행사 없이 평소 일상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25일 특별한 행사 없이 평소 일상과 다름없이 업무에 전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례회의인 확대 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평소처럼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남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초심을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든 참모들에게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지를 뛰는 것인 만큼 취임 3주년 날도 평지의 한 지점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및 오찬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평지를 5년 뛰고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용한' 3주년을 보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각종 현안을 챙기고 확대비서관회의 발언을 통해 참모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정부 3년 총체적 실패"

민주 '정권 역주행 3년' 보고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지난 3년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던 총체적 실패의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그간의 '10대 실정'으로 ▲무너진 서민경제 ▲심화된 양극화 ▲악화된 나라재정 ▲파탄난 남북관계 ▲후퇴한 민주주의 ▲실패한 공직인사 ▲총체적 안보무능 ▲국민무시 4대강사업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외면받은 농·어민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권은 출범 1년만에 우리나라를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등 '3대 위기'로 몰아넣었다"면서 "2년차에는 본격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팽창적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 가계부채 위기를 심화시켰고 3년차에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 세종시와 과학벨트 약속 파기, 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